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영등포 교도소에서 한병용(한재동,전 병용)을 통해 내게 보낸 이부영의 편지는 ‘박(총철) 군 건의로 구속된 조(한경), 강(진규) 건은 완전 조작극이야’로 시작, 별지로 된 추신(追伸)을 통해서 박총철 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나머지 고문 경관 3명의 이름과 직위를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은폐 조작의 경위와 함께 2월 27일에 검사 안상수가 교도소로 찾아와 조한경으로부터 고문 경위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청취하고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 잘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담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부영은 이 같은 조작 사실을 한두 언론에 제보해서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기자 출신다운 제안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부영의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1월 14일의 박총철 죽음 이후 그와 관련된 기사를 샅샅이 훑어 정황 증거를 보완하면서 언젠가 발할 발표문 초안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수배 중인 몸으로 언론사와 접촉한다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고, 설사 접촉한다고 하더라도 그

1987,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정에서 나를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 무척이나 두려웠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그 무렵 예정되어 있던 임시국회에서 분회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정치권에 있는 친구들을 통한 조심스러운 탐문 과정에서 한때는 그것이 성사되는가 싶기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의원이 자신을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해 달라고 거꾸로 사정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일을 더 이상 진척시킬 수가 없었다.

박총철 고문치사 조작 사건

한편으로 나는 김수환 추기경과 당시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일을 맡고 있었던 함세웅 신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지를 썼다. 처음에는 단지 내가 들어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차 이 엄청난 정권 차원의 조작 사건을 빛 속에 드러내 줄 것을 간청하는 방향으로 편지 내용이 바뀌어 갔다. 연락은 나를 숨겨 주고 있던 고영구 변호사의 부인 황국자 여사(1943~2007)와 딸 고은영이 맡았다. 이들이 명동성당은 물론, 주임 신부가 해외출장 중이라 함세웅 신부가 주일 미사를 집전하던 구파발성당에 까지 찾아가서 내 편지를 전했다. 그러나 이제나저제나, 가타부타의 말씨이나 기다리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는 이 충격적인 진실의 제보자가 나 김정남이라고 밝혀

도 좋다는 간곡한 뜻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사제단의 어깨에 있다, 전두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이 진실의 공개 여부에 달려 있다, 어떻게 하든 사제단이 십자가를 저 달라고 때를 쓰며 매달렸다.

실제로 나는 사제단 성명의 마지막에서 “이 사건 범인 조작의 진실이 박총철 군의 고문 살인 진상과 함께 명쾌하게 밝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연 하더라는 얘기를 듣고는 그 일을 더 이상 진척시킬 수가 없었다.

합세웅 신부는 5월 17일(그날은 주일날이었다), 내가 보낸 편지를 구파발 성당에서 받아 읽고는 “그래, 할 수밖에 없구나”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홍재동 성당으로 사제단의 단장 격인 김승훈 신부에게 편지를 찾아가 맡았어 내가 보낸 편지를 전했다. 옆에는 김 신부의 어머니이 계셨다. 어머니는 그 무렵 이 나라에 큰 난리가 나는 꿈을 꾸었고, 바로 어젯밤에는 난리통에 김승훈 신부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성모님께서 건져 올려 주시는 좋은 꿈을 꾸셨다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자리를 피해 주셨다.

합세웅 신부가 “내일 성명서 발표는 신부님이 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김승훈 신부는 기쁘게 “내가 이번에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것은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1987년 5월 18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광주민주화쟁 제7주년을 기념하고 박총철 군을 추모하는 미사가 거행되었다. 성당 마당은 미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신자와 일반인으로 가득 찼다. 김수환 추기경은 미사 강론을 통해 “눈 감고 귀 막고 외면한 죄를 용서하십시오”라며 “사제로서 전 생애를 바쳐 이 시대 구원의 십자가를 짊어지자”고 비장한 결의를 내비쳤다. 김수환 추기경도 미사 후에 전개될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구속 각오한 3120자 성명서

1부 미사가 끝나고 김승훈 신부가 제대에 올랐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 절을 할 때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장백의(長白衣)가 머리를 덮었다. ‘박총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의 제목이 낭독되자 성당 안팎이 술렁였다. 성명을 읽는 김승훈 신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듣는 사람들은 목소리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마침내 이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미사에 다녀온 황국자 여사로부터 들었다. 내가 할 일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내가 쓴 성명의 전문이 3120자라는 것을 나는 김승훈 신부가 남긴 글을 통해서 비로소 알았다. 구속을 염두에 두고 얼마나 긴장된 가슴으로 그 성명을 읽었으면 글자 수까지 헤아렸을까, 신부님께 정말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럼습니다.

청춘 특·특



전경훈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수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일꾼을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청년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청년 정책’이 발굴되기를 바라며 후보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후보자들이 청년 정책을 수립할 때 자신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선거운동원에 포함된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을 것이다. 이것은 청년을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는 방

지방선거서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되길

범이기도 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라 이들의 말 대다수가 청년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맹신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에 있는 젊은층의 의견을 통해서도 좋은 청년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많은 청년 정책들을 볼 때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은 거의 없는 듯하다.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 중 대한민국 대다수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체감하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청년 정책의 대부분이 청년 창업, 청년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되면서 점차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도 많아 보인다. 한 조사에 의하면 광주 지역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52억여 원이 사용돼 400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지만 이중 절반이 3년 이내 폐업을 했다고 한다. 단순하게 창업 지원금을 마련해주는 정책만으로는 기업에 대한 운영과 노하우 등의 실전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경영이 풍부한 전문 기업인과의 멘토 결연 등 지속적인 관리로 폐업률을 최소화하는 추가

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창업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역시 ‘청년 일자리’ 문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주가 전국에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꼽혔다. 아직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직장 내 열악한 환경에 의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광주는 산업 기반이 취약한 탓에 좋은 환경의 기업이 부족해 이직률이 높은 듯하다.

문제는 이직을 마음먹은 청년들이 광주에서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그나마 형편이 좀 더 나은 수도권으로 옮긴다는 점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세 호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광주에서 20대, 30대 청년 5000여 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광주의 청년 인구 유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중 유출,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부동

산 시장의 냉각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 경제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모두 깊게 고민해야 한다. 얼마 전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청년드림’(Dream) 사업과 같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해주고 많은 청년들을 정규직 전환의 성과까지 낼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낸다면 어떤 청년이 광주를 떠나겠는가.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운영한 시장의 맞춤형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년은 실패해도 젊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들 한다.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없다면 허울뿐인 청춘 아니겠는가.

6·13 지방선거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청년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기 고



정향재 농협전남본부 양곡자재반 차장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지었던 눈에 타 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을 재배하면 1ha당 평균 3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와 내년 5만ha씩 벼 재배면적을 총 10만ha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쌀 공급을 줄여 생산자 소득을 안정화함과 동시에 쌀 변동직불금 지급 금액도 줄일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조사한 올해 20kg 기준 산지 평균 쌀값은 4만1210원이다. 지난 몇 년간 풍년과 국민 쌀 소비 감소로 하락세를 보이던 쌀값이 2014년 12월 이후 처음 4만1000원선을 회복한 것이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의 아픔이 컸다. 그 아픔에 동참하고자 전남농협은 임직원 쌀 100만 포 팔기운동, 기업체 MOU 체결, 대형 소비자 확

쌀 생산조정제 적극 참여하자

보, 소비 촉진 행사 등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쌀 시장 분위기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쌀값 회복에 있어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대해 뚜렷한 생각을 가진 정부의 대책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그 첫 번째가 쌀 수확기 대책이다.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기 전에 역대 최대인 37만t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극심한 가뭄 등 자연재해로 쌀 수확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의 역대 최대 시장 격리 물량 발표는 시장에 쌀 공급량을 줄여 가격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농협도 이에 발맞춰 생산자가 원하는 물량은 100% 수매하겠다는 의지로 역대 최대인 1조9000억원의 벼 매입 자금과 상조금융 특별회계 5000억 원을 조기 지원했다.

지난해 처음 쌀 업무를 맡아 쌀과 관련된 기사들을 스크랩했었다. 그 자료를 최근에 다시 꺼내봤다. 작년 이맘때 이슈는 폭락하는 쌀값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그 방안으로 생산자를 비롯한 농업계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정책이 바로 쌀 생산조정제다. 농업계가 그토록 원했던 쌀 생산조정제가 지난 1월 22일 시작됐으나, 한달 후인 지난달 22일 3599ha로 목표 대비 7.2% 수

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도 사업 시행 지침을 변경해 사업신청 대상농지를 2017년 벼 생산농지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신청 기간도 4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여기에 인삼도 지원 대상품목으로 포함시켰다. 대체 작물로 가장 많이 생산된 콩이나 사료용 벼에 대한 판로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쌀 생산조정제의 참여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쌀값 회복세와 올해 말 쌀 목표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인다. 쌀 생산조정제 성공은 공급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화하고 전체 쌀 생산능가 소득 향상과 직결된다. 하지만, 생산자는 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벼 대신 처음 생산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안도 이해는 된다.

‘물 들어올 때 두 저어라’는 속담이 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왔을 때 노력하라는 것이다. 쌀 생산능가와 농협을 비롯한 모든 쌀 생산자 단체가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쌀값이 회복되고는 있지만 지난해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해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고 정부의 강력한 시장 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시 폭락할 수 있다. 그때

를 대비한 보험이 바로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이 아닐까 생각한다.

생산자들이 쌀 생산 감축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쌀 공급이 많아질 경우 정부에 시장 격리를 비롯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쌀 생산자와 농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모를 수도 있다. 생각보다 정책이 농업 현장에까지 전파되는 시차가 발생할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농협이 공동으로 노력해 정책의 효과는 발휘될 수 있다. 최근 충남 보령에 있는 남포농협이 자발적으로 농업인 교육을 통해 50ha의 논에 쌀 생산조정제 참여 약정을 맺었다는 기사를 봤다.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콩과 보리를 이모작으로 재배, 쌀 재배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릴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처럼 자치단체와 함께 쌀 생산능가와 농협이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대한 이해의 장을 함께 마련해 교육하고, 성공 사례를 알린다면 사업 참여는 늘어날라 기대한다. 쌀값 폭락 없이 농업인들이 적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식량이자 힘인 쌀 소비도 더 이상 줄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었다.

社 說

평화당 교섭단체 제안, 선거연대로 이어질까

민주평화당(평화당)이 어제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개혁 성향의 평화당과 진보 성향의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현재 두 개의 보수야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루는 2대1의 원내 협상 구도가 2대2 구도로 팽팽해진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병안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 본청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남을 갖고 “오늘 평화당의 최고 위원-의원 연석회의 및 당내 워크숍에서 의논한 결과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만장일치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제안을 받은 정의당은 오늘 아침 의원총회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신중하되 빠르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 원내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발언권이 커진다. 상임위원회 간사 자격도 주어지며 오는 5월 국회 하반기 원

구석 협상에서 상임위원장직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진보 정당인 정의당으로서 정의당과 직결된 일인 만큼 당내에서 팽팽하게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비교섭단체로서 그동안 받은 불이익 등을 감안하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과 정의당 두 당은 그동안 사법 개혁,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 왔다. 이 때문에 두 당 간 공동교섭단체가 성사되면 민주당과 함께 개혁 문제 등 ‘정책 연대’가 본격화하면서 ‘지방선거 연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두 당은 그러나 ‘정책 연대’와 선거 연대는 별개’라며 일단 선을 그치고 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고 있지는 않다. ‘당 대당’ 차원은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에 한해서라도 과연 지방 선거 연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세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제구실 못하는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를 정부 차원에서 돌보고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라 광주·전남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일제히 문을 열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필수 인력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설립에만 급급하다 보니 운영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우선 개소’해 운영되고 있다. ‘우선 개소’란 별도의 센터 건물을 완공한 뒤 운영하는 ‘정식 개소’와 달리 소규모의 인력을 채용하고 임시 공간을 활용해 필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광주 지역 각 센터가 채용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담 인력은 동·남·북·광산구가 각 5명, 서구 6명 등으로 센터별로 필요한 최소 인력(15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남 역시 22개 시·

군의 전담 인력은 170명으로 전남도가 필수 인력으로 책정한 287명의 59.2%에 머물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 지역 치매 환자 수는 6만5108명으로 센터 직원 1명당 관리 환자 수가 332명에 이를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센터는 상담·등록 관리와 조기 검진, 워터, 가족 지원, 인식 개선·홍보 등 5개 주요 프로그램 가운데 상담·등록 관리만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소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처럼 정부와 자치단체가 면밀한 준비 없이 설치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전남은 치매 유병률도 높다. 최근엔 치매 노인들의 실종·사망 등 각종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 확보부터 서두르고 프로그램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어제 평양으로 향하면서 특사(特使；special envoy)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사란 ‘일국에서 타국에 특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또는 그 나라와 관계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는 대표적·일시적 성격을 지닌 사절’을 말한다. ‘특별사절’ 또는 ‘특과 사절’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통상의 외교 사절과는 구별된다.

특사는 크게 사무 사절과 예의 사절로 나뉜다. 사무 사절은 타국과 일시적으로 경제·절충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경우 파견되는 임시 사절과 국제·외교회의에 국가를 대표해 파견되는 대표단 등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쌀 생산자와 농협에서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모를 수도 있다. 생각보다 정책이 농업 현장에까지 전파되는 시차가 발생할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농협이 공동으로 노력해 정책의 효과는 발휘될 수 있다.

최근 충남 보령에 있는 남포농협이 자발적으로 농업인 교육을 통해 50ha의 논에 쌀 생산조정제 참여 약정을 맺었다는 기사를 봤다.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콩과 보리를 이모작으로 재배, 쌀 재배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알릴 참여를 이끌어 냈다.

信使)로 일본에 파견된 흥문관 응교 김기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 수립 이후에는 1948년 11월4일 중화민국 난징에 정환범이, 1949년 3월부터 1951년 초까지 조병암이 유엔에 특사로 각각 파견된 적이 있다.

남북 간 특사 교환의 시작은 지난 1972년 5월2일 당시 이후라 중앙정보부장 이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 김일성 주석을 두 차례 면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씨는 공개된 특사기록이

는 밀사(密使)에 가까웠다. 이후에도 제5공화국 때 장세동 안기부장, 노태우 정부 때 박철언 정부장관과 서동균 안기부장이 각각 대북 밀사 역할을 했다.

공개된 대북 특사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5월 평양을 방문한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처음이다. 이후 인 씨는 두 차례 더 대북 특사 역할을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북 특사로 파견됐다.

이번 대북 특사단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특사로 외국에 파견된 최초 인사는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후 수신사(修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